

2014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정의당 진보정의연구소

진보정의연구소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5층			○		

- 「주」 1. 「기타」 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 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 고
박사급: 2명	자체고용: 1명	
석사급: 5명	외부파견:	
기 타: 5명		
합 계: 12명	합 계: 1명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622,686,375	1,182,542	86,734,749	710,603,666	607,749,393	102,854,273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109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31010 ~ 140630	안전행정 위원회	당 발전전략을 위한 기초연구	외부전문가	34	
140311 ~ 141110	안전행정 위원회	2014년 스웨덴 총선과 2015년 영국총선, 그리고 2016년 한국총선에서 갖는 함의에 대한 연구	외부전문가	84p	
140327 ~ 140904	안전행정 위원회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의 비전과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48p	
140407 ~ 141006	안전행정 위원회	스웨덴 사민당의 선택과 정치전략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가	55p	
140106 ~ 140108	안전행정	지방선거제도 개편 관련 동향과 정의당의 대응방향	자체	3p	
140201 ~ 140210	안전행정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향	자체	12p	
140210 ~ 140212	안전행정	국회 정치개혁 특위 현황과 대응방향	자체	2p	
140201 ~ 140226	안전행정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주요의제와 대응방향	자체	12p	
140101 ~ 140109	외교통일	201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정세 전망	자체	4 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40112 ~ 140212	외교통일	역사영토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평화공생의 공동체를 향해	자체	11 p.	
140901 ~ 140910	안전행정	정부조직개편	자체	4p	
140910 ~ 140926	안정행정	공무원윤리법 개정	자체	4p	
141001 ~ 141014	안전행정	공기업개혁	자체	3p	
141015 ~ 141029	안전행정	국민안전처 현황 분석	자체	4p	
141101 ~ 141112	안전행정	개방형임용제	자체	4p	
141201 ~ 141212	행정자치	공무원연금개혁	자체	3p	
140107 ~ 140109	국회운영위원 회	1월 정치 정세전망 : 정치메세지와 개헌 대응	자체	4p	
140211 ~ 140213	국회운영위원 회	2월 정치정세전망 : 지방선거 대응과 관리	자체	4p	
140213 ~ 140220	법제사법위원 회	사법의 정치화	자체	4p	
140304 ~ 140306	국회운영위원 회	3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정계개편과 제도적 대안	자체	3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40319 ~ 140321	국회운영위원회	3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지방정치와 제3대안세력	자체	3p	
140402 ~ 140404	국회운영위원회	4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지방선거와 골목복지 체제	자체	3p	
140416 ~ 140418	국회운영위원회	4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세월호 참사	자체	3p	
140625 ~ 140627	국회운영위원회	6월 4주차 정치정세전망 : 팟캐스트 효과와 7.30재보궐 대응	자체	3p	
140701 ~ 140829	법제사법위원회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연구	자체	11p	
140820 ~ 140904	국회운영위원회	국회개혁	자체	3p	
140922 ~ 141002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정의당 위헌소송 관련	자체	3p	
140922 ~ 140924	국회운영위원회	9월 4주차 정치정세전망 : 복지, 증세 논쟁과 개입	자체	4p	
141001 ~ 141008	안전행정위원회	양당 정치개혁 의제 대응	자체	6p	
141012 ~ 141014	국회운영위원회	10월 3주차 정치정세전망 : 국정감사 대응	자체	3p	
141027 ~ 141029	국회운영위원회	10월 5주차 정치정세전망 : 핵심 지지층 확대와 생활밀착형 대안	자체	3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41015 ~ 141103	안전행정위원회	정치혁신 과제	자체	11p	
141027 ~ 141103	국회운영위원회	선거제도 및 개헌 대응	자체	5p	
141110 ~ 141112	국회운영위원회	11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대응	자체	3p	
141119 ~ 141126	안전행정위원회	선거제도 개혁 대응방안	자체	5p	
141126 ~ 141128	국회운영위원회	11월 3~5주차 정치정세전망 : MB 자원외교 문제 대응	자체	3p	
141210 ~ 141212	국회운영위원회	12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4대강 사업 및 선거제도 개혁 대응	자체	3p	
140309 ~ 140318	안전행정	기초단위 무공천 방침의 문제점	자체	6p	
140319 ~ 140320	안전행정	정치권의 기초공천 논란 배경과 시사점	자체	2p	
140401 ~ 140404	안전행정	지방재정 위기 현황과 대안	자체	2p	
140611 ~ 140614	안전행정	국제비교를 통한 선거구 제도 검토	자체	6p	
140922 ~ 140924	안전행정	지방세수 분석과 대응방향	자체	3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41010 ~ 141013	교육문화체육 관광	교육감직선제 폐지 논란과 당의 대응방향	자체	2p	
141011 ~ 141013	교육문화체육 관광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지방교육재정 현황	자체	2p	
141012 ~ 141013	안전행정	담뱃세 인상이 지방재정,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체	2p	
141026 ~ 141030	안전행정	긴급재정관리제도 문제점과 대응방향	자체	2p	
141021 ~ 141031	안전행정	정부조직법 쟁점과 검토의견	자체	5p	
141101 ~ 141104	안전행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 검토	자체	3p	
141110 ~ 141112	교육문화체육 관광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편성 논란과 대응방향	자체	2p	
141125 ~ 141127	교육문화체육 관광	누리과정 합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자체	3p	
141022 ~ 141222	안전행정	선거제도 개혁방안	자체	25p	
141201 ~ 141209	안전행정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내용과 문제점	자체	8p	
140224 ~ 140326	기획재정위원 회	생태사회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	외부전문가	44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40327 ~ 140401	기획재정위원회	생태사회전환과 어소시에이션	자체	6p	
140311 ~ 14040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독일사례로 본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	외부전문가	40p	
140410 ~ 14041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현황과 정책사례	자체	9p	
140324 ~ 14042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내 전력시스템 개혁과제	외부전문가	32p	
140424 ~ 14042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천연가스 발전 징검다리론과 RPS개혁	자체	8p	
140401 ~ 14043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정책의 개혁과제	외부전문가	50p	
140502 ~ 140507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의현실과 농정개혁 및 쌀 관세화 대응방향	자체	8p	
140714 ~ 140813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순환형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외부전문가	31p	
140814 ~ 140819	환경노동위원회	국내 자원순환의 현황과 정책과제	자체	5p	
140820 ~ 140828	기획재정위원회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평가	자체	12p	
140901 ~ 141001	정무위원회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마을만들기 정책과제	외부전문가	107p	
140919 ~ 140925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정부의 쌀 산업발전대책 개괄과 문제점	자체	3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41002 ~ 141007	정무위원회	에너지전환 마을만들기의 국내외 사례 시사점	자체	9p	
141001 ~ 141008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모멘텀을 위한 정치의 역할	자체	6p	
141010 ~ 141014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삼척원전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자체	2p	
141001 ~ 141115	운영위원회	당원정치의식조사	자체	53p	
141103 ~ 141202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재생가능에너지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외부전문가	45p	
141203 ~ 141208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독일과 국내의 재생가능에너지분야 중소기업정책 비교	자체	9p	
140206 ~ 140210	외교통일 /국방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 문제점	자체	3p.	
140228 ~ 140313	외교통일 /국방	한일 군사협력 추진의 대일-지역 정책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자체	14p.	
140314 ~ 140319	외교통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망, 한반도에의 함의	자체	3p.	
140323 ~ 140326	외교통일	한중, 미중,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	4p.	
140328 ~ 140329	외교통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 주요 내용과 평가	자체	4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40628 ~ 140702	외교통일	시진핑 방한과 예상 의제 및 주장	자체	4p.	
141023 ~ 141027	국방/ 외교통일	전략권 전환 무기 연기 논점과 비판 및 주장	자체	5p.	
141101 ~ 141112	외교통일	동북아 외교전의 치열한 전개와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자체	4P	
141201 ~ 141222	국방/ 외교통일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 법률안 제정의 문제점, 파병의 기준과 원칙 등 정립	자체	10p.	
140212 ~ 140213	환경노동위원 회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평가 및 향후과제	자체	2p	
140320 ~ 140321	환경노동위원 회	임금체계 개편안 매뉴얼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자체	2p	
140626 ~ 140627	환경노동위원 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문제점	자체	3p	
141013 ~ 141014	환경노동위원 회	노동시간 단축 법안내용 검토 및 대안	자체	4p	
141028 ~ 141029	환경노동위원 회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의 효과성 검토	자체	2p	
141111 ~ 141112	노동환경위원 회	경비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및 처우개선 방안	자체	2p	
141127 ~ 141128	노동환경위원 회	정부의 노동유연화 확대 및 정리해고 요건 완화에 대한 문제	자체	3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41211 ~ 141212	노동환경위원회 회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과 비정규직 보호방안	자체	2p	
140101 ~ 140301	여성가족위원회 회	여성과 아동 안전을 위한 지역의제 발굴	자체	144p	
140110 ~ 140111	여성가족위원회 회	경력단절 여성지원 새일센터 평가	자체	2p	
140213 ~ 140214	여성가족위원회 회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할당제에 미치는 효과	자체	3p	
140403 ~ 140404	여성가족위원회 회	공천제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과 공천현황	자체	3p	
140928 ~ 140929	여성가족위원회 회	여성가족부 2015년 예산안 분석	자체	4p	
140928 ~ 140929	여성가족위원회 회	성매매특별법 제정 10년, 향후 과제	자체	3p	
141014 ~ 141015	여성가족위원회 회	군대 내 성범죄 실태와 예방책	자체	3p	
141028 ~ 140029	여성가족위원회 회	성별격차지수(GGI)를 통해 본 성평등 정책방향	자체	2p	
141127 ~ 141128	여성가족위원회 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자체	6p	
141125 ~ 141128	여성가족위원회 회	인구구조 여초현상 대비 여성·노인 정책의 방향	자체	6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41211 ~ 141212	여성가족위원회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자체	4p	
141211 ~ 141212	여성가족위원회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둘러싼 쟁점과 성소수자 인권	자체	4p	
140401 ~ 140414	정무위원회	정부의 '규제개혁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평가	자체	12p	
140621 ~ 140701	정무위원회	우리은행매각 추진배경과 전망	자체	2p	
140922 ~ 141004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개정과 단말기가격 및 통신비인하 정책방향	자체	8p	
141111 ~ 141113	기획재정위원회	(2014~2015) 경제·금융 동향과 전망	자체	2p	
141101 ~ 141118	정무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외부전문가 공동	51p	
141126 ~ 141128	정무위원회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입장	자체	2p	
141101 ~ 141210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 기본법률 제정안	외부전문가 공동	83p	
141101 ~ 141210	정무위원회	고령화시대 금융산업변화 및 금융정책방향	외부 전문가	66p	
141101 ~ 141210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과 실현방안	외부 전문가	106p	

- 「주」 1. “연구기간”은 0월 0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연구분야”는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연구방법”은 자체, 외부전문가, 00와 공동 등으로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실적의 주요내용은 건별로 ‘붙임’ 별지에 작성합니다.

나. 토론회 등 개최(41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2014.02.12 오후 2시~4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1세미나실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	일본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한일 양자 간의 이익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함.	
학술회의	2014.02.19 오후 2시~6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진보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평가·전망·과 제	위기에 빠진 진보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학술회의로 진보정치가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방법과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함.	
토론회	2014.03.20 저녁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저자와의 만남 - 유신, 한홍구 “유신이 되살아났다”	유신시대를 통해 오늘날 지식인들의 침묵과 무기력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청중들로 하여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포럼	2014.03.21 오후 2시~4시	중앙당 회의실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 1차포럼	정의당 국가비전과 실천전략에 대한 기본안을 제시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을 초청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포럼	2014.03.26 저녁 6:30분~9시	중앙당 회의실	제1차 생태사회전환 포럼	생태사회전환의 필요성과 생태경제학의 가능성 ; 자본주의 고도성장과 생태사회전환 필요성, 주류 경제학의 현실적 한계 ; 열 역학법칙과 생태경제학의 방법론 ; 생태거시경제모델 해외연구 동향과 한국경제에서의 가능성	
포럼	2014.04.10 오후 3시~6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5간담회실	월례정치포럼 : 양당체제 강화, 유권자의 선택인가?	양당체제 강화와 유권자 지지편성, 양당체제 강화 국면에서 정의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진보정치의 전략은 무엇인지 모색해보자고 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포럼	2014.04.09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제2차 생태사회전환 포럼	독일의 사례로 본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과 녹색일자리 창출 사례 ; 유럽과 독일의 풍력, 태양광 발전 산업정책 사례 ; 독일 사례로 본 녹색과정과 고용창출	
포럼	2014.04.18 오후 2시~4시	중앙당 회의실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 2차포럼	정의당 국가비전과 실천전략에 대한 전문가 그룹 1차 토론을 진행	
포럼	2014.04.23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제3차 생태사회전환 포럼	에너지 전환의 구상과 실천전략 ; 한국 전력시스템의 성격과 지속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과제 ; 원전추진론 대 에너지전환론 극복과 천연가스 발전의 가교역할 실천전략과 정책과제 ; 분권형 전력시장 창출전략	
포럼	2014.04.30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제4차 생태사회전환 포럼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방향 ; 석유 의존형 농업의 탈피, 친환경농업의 확대, 도시소비자와의 연대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써 농촌지역의 자발적 발전방향 ; 농업정책, 식품정책, 농촌정책의 조화정책	
포럼	2014.05.02 오후 2시~4시	중앙당 회의실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 3차포럼	정의당 국가비전과 실천전략에 대한 2차 토론회 진행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2014.05.08 오후 2시~5시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	세월호참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국가의 존재에 의문을 갖게 하는 미증유의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한 지금, 해운자본,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관련자, 구난구조 당국과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살펴보고자 함. 또한 현재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 국정운영, 관료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 생존자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증장기 대책 모색.	
포럼	2014.05.14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제5차 생태사회전환 포럼	국가의 역할-공공부문투자, 사회제도 및 규범형성과 소비주의의 지양, 사회적 경제육성, 거버넌스 역할 강화	
토론회	2014.06.11 오후 2시~6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8간담회 실	6.4지방선거 와 한국정치 (평가/전망/ 대안)	6.4지방선거에서 드러난 한국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한 6.4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에 대한 전망과 대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토론회	2014.06.17 오전 10시~1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4.16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치유의 길찾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길을 찾아보고자 함. 국가의 역할과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모색해보고자 함.	
토론회	2014.07.10 오후 2시~5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5간담회 실	4.16 세월호 참사 그 이후-권력의 자화상	한국사회에서 정치와 방송언론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개의 강력한 권력축임. 그러나 4.16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무능, 정언유착, 보도행태는 국민에게 깊은 절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킴. 이에 정치권력과 방송언론 권력의 현주소를 비판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자 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포럼	2014.08.13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제6차 생태사회전환 포럼	자원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 폐기물 발생 처리 실태 및 자원순환 목표 ; 일본 순환형사회 국축추진 현황 ; 일본사례의 성과와 한계	
포럼	2014.08.18 오후 2시~4시	중앙당 회의실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 4차포럼	정의당 국가비전과 실천전략에 초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토론회	2014.08.28 오후 7시~9시	코앤티 (상수역 근처 카페)	드라마 '정도전'의 작가 정현민을 만나다	정도전이 꿈꾼 대동의 이상사회는 무엇인지 그가 600년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도전의 정현민 작가와 함께 조망해보고자 함	
토론회	2014.10.08 오후 2시~6시	서강대학교 다산관 209B호	세월호의 사회적 담론 분석과 세월호 모멘텀을 이루기 위한 실천	세월호 이후, 공적애도에 대한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정치권의 비난의 정치, 그리고 신뢰할 만한 중재집단의 부재 등이 야기한 한국의 혼란상에 주목하고 나아가 세월호 사건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근본적 체계개혁의 모멘텀으로 역할할 수 있는 세월호 모멘텀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포럼	2014.10.01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제7차 생태사회전환 포럼	지역주도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의 정책과제 ;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의 문제점 ; 지역 및 주민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 활용 국내외 사례 ; 지역 및 주민주도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방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	
토론회	2014.10.27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저자와의 대화 -‘장도리’ 박순찬 화백, ‘4컷 만화에 대한민국을 담다’	장도리는 1995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시사만화로서 장도리의 박순찬 화백은 20여년의 기간동안 해학과 풍자로 우리사회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있음. 박순찬 화백을 초청해 4컷 만화에 대한민국을 담는 통찰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함.	
포럼	2014.10.22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및 연구위원 대상 정기적 토론의 장을 만든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정보 및 여론흐 름의 지속적 취합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당지도부의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기본 자료로 활용 *주어진 정치지형과 민심의 흐 름속에서 정의당 전략구상의 핵심포인트 잡기 -2016년 총선/17년 대선 대응 에 초점을 두고 현시기 당발전 전략과 과제제시 -상황 돌파를 위한 담론과 아 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하여 정기적인 포럼을 진행 하기로 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포럼	2014.10.30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서복경 박사초청 세미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여론 조사 문항 형성에 대한 방법에 대해 모색해본다.	
포럼	2014.11.13오 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이상신교수 (숭실대) 초청세미나	-진보정당은 생존할 수 있는가?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16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생존방식에 대해 스키마, 인지부조화, 그리고 조직을 통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토론회	2014.11.26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이상엽 사진작가 초청토론회 -사진의 본 邊境의 정치	-한국사회에서 변경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변경에 있는 사람 들은 또 누군지 이상엽 사진작 가의 작품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함	
포럼	2014.12.02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제8차 생태사회전환 포럼	-중소기업이 바라본 정부 재생 가능에너지산업 정책의 개선과 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분야의 정 책금융, 기술지원, 국내외 시장 형성, 정부정책 추진절차 등의 개선과제를 관련 사업체를 운 영자를 초청해 들어봄. -독일과 비교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개선과제 ;독일의 지원정책(금융, 기술개 발, 국내외 시장형성 지원 등) 과 비교한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분야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선과제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포럼	2014.12.04오 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전승우(진보정 의연구소 부소장) 초청세미나	-정치와 마케팅 ;정치마케팅은 정치 엘리트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도구나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정의당의 포지셔닝에 대해 모색해본다.	
포럼	2014.12.15 오후 1시~3시	중앙당 회의실	지나오미 교수(일본 홋카이도대학 교 공공정책대학 원) 초청포럼	-‘邊境’으로서의 이주민:일본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듣는다. ;노동, 결혼, 교육 등에 따른 이주민 증가에 조응해 일본과 국내경험을 통해 한국사회가 올바른 다문화사회,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주민 정책을 모색하고자 함	
포럼	2014.12.18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초청세미나	정의당의 청년세대 전략에 대하여 청년유니온 그룹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를 초청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고민과 과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여론조사	2014.01.24 ~ 2014.01.25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통령 평가(소신있는 일처리, 공직자 인사, 소통, 위기상황대처능력, 국민생활안정, 갈등해소와 통합) 등	
여론조사	2014.02.21 ~ 2014.02.22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자 단일화에 대한 인식 등	
여론조사	2014.03.21 ~ 2014.03.22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대한 찬반여부 등	
여론조사	2014.05.23~ 2014.05.24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6월 지방선거 성격에 대한 인식 등	
여론조사	2014.06.20 ~ 2014.06.22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박근혜정부 인사문제의 가장 큰 원인	
여론조사	2014.07.25 ~ 2014.07.26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 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	
여론조사	2014.08.22. ~ 2014.08.23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개헌과 관련한 입장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소방관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반 등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여론조사	2014.09.19 ~ 2014.09.20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여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한 찬반여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등	
여론조사	2014.10.17 ~ 2014.10.18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입장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 -선거규제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 등	
여론조사	2014.11.21. ~ 2014.11.22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입장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입장 등	
여론조사	2014.12.12 ~ 2014.12.13	한국리서치	옴니버스 조사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입장 -국정조사 필요여부: ① 4대강 비리의혹 ② 자원외교 비리의혹 ③ 방위사업 비리의혹 ④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의혹 등	

「주」 1. “개최명”에는 토론회, 심포지엄, 학술회의, 포럼, 세미나·공청회·진상조사·여론조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다. 교육·연수활동(7회)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연구소-중앙당직자 합동워크숍	2014-11-14 ~ 2014-11-15	강촌 강변테라스	정세분석 및 당직자 및 연구원들 친목도모	
연구소 집합교육	2014-12-29	중앙당 회의실	2015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당원의무교육	2014-12-10	중앙당 회의실	성평등 및 장애평등 교육	
여성당원교육	2014-10-18 ~ 2014-10-19	평택무봉산청소년 수련원	여성주의 정치철학	
정예당원교육	2014-06-21 ~ 2014-06-22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세종시 조치원)	6.4지방선거 평가 워크숍	
연구소 정책기획 워크숍	2014-06-20 ~ 2014-06-21	강원도 속초 국민은행 연수원	지방선거 공약 평가 및 730 재보궐 선거 정책 대응 논의	
연구소 정책기획 워크숍	2014-09-16 ~ 2014-09-17	한화리조트 수안보온천	정책브랜드 발굴을 위한 정책세미나 의제 논의, 지역사업 모델 발굴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 합니다.

라. 정책홍보(56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14-02-28	동영상	홈페이지 게시 및 당원 이메일 발송	사회복지세의 도입 필요성	
2014-01-0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박근혜 대통령, 의료민영화 기필코 할 것인가	
2014-01-06	정책논평	상동	격랑의 동북아 질서 속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	
2014-02-07	정책논평	상동	쌍용차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한다	
2014-02-10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향	
2014-02-10	정책브리핑	상동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 문제점	
2014-02-1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생활임금조례안 부결시킨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정치적 책임 뒤따를 것	
2014-03-04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한미 당국의 강경해진 반응	
2014-03-0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불량 음식-전투화 문제 스스로 시정조치 않아 감사원 적발된 군 비판과 국방개혁 촉구	
2014-03-11	정책논평	상동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하는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라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14-03-18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당공천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위 무공천 방침	
2014-03-19	정책브리핑	상동	우크라이나 사태, 전망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2014-03-26	정책브리핑	상동	한중, 미중,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2014-03-29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 주요 내용과 평가	
2014-04-0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국회 노사정위, 휴일근로 추가허용 '52+8'은 안 돼	
2014-04-08	정책논평	상동	윤모 일병 사망, 깊은 애도와 철저 수사 촉구	
2014-04-14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규제개혁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평가	
2014-04-27	정책브리핑	상동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전망과 비판적 평가	
2014-04-2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임금 없는 성장',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3권 보장으로 해결해야	
2014-04-28	정책논평	상동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사망사고에 책임져야	
2014-06-10	정책논평	상동	저소득 노동자 사회보험 지원요건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14-06-10	정책논평	상동	국방부 발표 ‘군 복무 경력 학점인정제’ 실효성 없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민간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2014-06-10	정책논평	상동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2014-07-01	정책논평	상동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가능’ 각의결정 비판과 대정부 제언	
2014-07-02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시진핑 방한과 예상 의제 및 주장	
2014-08-29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홍원 총리, 거짓말도 크게 하면 기업특혜가 민생돌봄으로 둔갑하는가?	
2014-09-01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선진국형 상대빈곤선 도입하여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2014-09-01	정책논평	상동	순서도 해법도 틀린 지방세제 개편방안	
2014-09-16	정책논평	상동	한미당국의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차기 정권의 전작권 전환도 막으려는 알박기다	
2014-09-18	정책논평	상동	내년 지방행정 분야 예산안, 지방재정 확충 의지 없이 재탕, 생색내기에 그쳐	
2014-09-18	정책논평	상동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14-09-25	정책논평	상동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형성에 역효과 우려돼	
2014-09-25	정책논평	상동	F-35A 도입 결정, 돈도 문제지만 안보에도 해가 된다	
2014-10-06	정책논평	상동	새누리당 노동시간단축 법안 비판받아 마땅해	
2014-10-08	정책논평	상동	지방교육재정 과탄시키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중단하라	
2014-10-11	정책논평	상동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사격 유감, 관련 단체는 자제하고 당국도 적극 나서야	
2014-10-14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	‘단통법’ 개정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정책방향	
2014-10-16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확전 방지, 청와대 의지 있나? 위험한 교전수칙도 개정해야	
2014-10-21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여성의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시간제일자리 후속대책 중단하라	
2014-10-22	정책논평	상동	정부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직업안전을 위협하지 말라	
2014-10-23	정책논평	상동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서민들의 고통만 키웠다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2014-10-24	정책논평	상동	사실상 파산제,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철회해야	
2014-10-27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주요 논점과 비판 및 주장	
2014-11-1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일자리 예산 확대와 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로 실업문제 해결해야	
2014-11-13	정책논평	상동	대법원 쌍용차 부당해고 판결 유감	
2014-11-26	정책논평	상동	정부의 노동유연화 방침 비판받아 마땅해	
2014-11-28	정책논평	상동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확대 반대한다	
2014-11-28	정책논평	상동	성관매 여성에 대한 경찰의 합정 수사를 반대한다	
2014-12-04	정책논평	상동	헌법 조항과 정신에 저촉되는 해외파병법은 절대 제정해서는 안 돼	
2014-12-08	정책논평	상동	지방자치 후퇴시키는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안된다	
2014-12-09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내용과 문제점	
2014-12-16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부동산 3법의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	
2014-12-2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2015 경제정책방향>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14-12-23	정책논평	상동	임대시장 활성화, 대기업과 투기자본에 대한 특혜 뿐	
2014-12-23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4-12-2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서민 주거안정 외면한 부동산3법 합의 규탄한다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27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14.01.09	웹진	미래시계 20호	자체발간	당원대상 이메일 발송	
2014.01.16	웹진	미래시계 21호	자체발간	당원대상 이메일 발송	
2014-01-23	웹진	미래시계 22호	자체발간	당원대상 이메일 발송	
2014-02-06	웹진	미래시계 23호	자체발간	당원대상 이메일 발송	
2014-02-13	웹진	미래시계 24호	자체발간	당원대상 이메일 발송	
2014-02-20	웹진	미래시계 25호	자체발간	당원대상 이메일 발송	
2014-02-27	웹진	미래시계 26호	자체발간	당원대상 이메일 발송	
2014-02-17	토론회자료	동아시아 평 화와 올바른 한일관계 정 립	자체발간	20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2014-02-19	토론회자료	진 보 정 치 의 새로운 시작 을 위하여: 평가·전망·과 제	한국정당학회 와 공동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2014-03-24	연구논문	정당만들기	외부용역	300부, 지도부 및 당직자 배부	
2014-03-26	토론회자료	제1차생태사 회전환포럼- 생태사회전환 의 필요성과 생태경제학의 가능성	자체발간	3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14-04-09	토론회자료	제2차생태사회전환포럼-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과 녹색일자리 창출사례	자체발간	30부, 토론회참석자 배부	
2014-04-10	토론회자료	양당체제 강화, 유권자의 선택인가?	한국정당학회와 공동	100부, 토론회참석자 배부	
2014-04-23	토론회자료	제3차생태사회전환포럼-에너지전환의 구상과 실천전략	자체발간	30부, 토론회참석자 배부	
2014-04-30	토론회자료	제4차생태사회전환포럼-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농업농촌정책의 방향	자체발간	30부, 토론회참석자 배부	
2014-05-12	토론회자료	세월호참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참석자 배부	
2014-05-14	토론회자료	제5차생태사회전환포럼-국가의역할	자체발간	30부, 토론회참석자 배부	
2014-06-18	토론회자료	6.4지방선거평가 및 전망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참석자 배부	
2014-06-24	토론회자료	세월호참사 트라우마 치유의 길찾기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참석자 배부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2014-07-10	토론회자료	세월호참사, 그 이후-권력 의 자화상	중앙당과 공동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2014-08-13	토론회자료	제6차생태사 회전환포럼- 자원순환형사 회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발간	3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2014-10-01	토론회자료	제7차생태사 회전환포럼- 에너지전환마 을 만들 기 의 정책과제	자체발간	3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2014-10-10	토론회자료	세월호를 들 러싼 사회적 담론 분석 과 세월호 모넨 팀을 이루기 위한 실천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와 공동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2014-11-04	백서	당원교육용 강의자료 (동영상)	외부용역	5매(CD), 연구소비치	
2014-11-04	연구논문	외부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의 진로	자체발간	30부, 지도부 배부	
2014-11-26	백서	당원 정치의 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FGI 최종보고 서	자체발간	30부, 지도부 배부	
2014-12-02	토론회자료	제8차생태사 회전환포럼- 중 소 기 업 이 바라본 정부 재생가능에너 지 산업정책 의 개선과제	자체발간	3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바. 그 밖의 주요활동(04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14-01-21	중앙당 회의실	제3차 연구소 이사회	-2013년 결산안 논의 및 승인 -2014년 사업계획안 논의 및 승인 -2014년 예산안 논의 및 승인 -기타	
2014-07-11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정의당-일본 사민당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해 석개헌 등 우경화의 파 장, 대안 모색” 발표, 일 본 사민당에 대한 제안 및 토론	
2014-10-11	국회 헌정기념관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강연회 및 야3당과 공개좌담회’ 실무 준비 및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 등 홈페이지 게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 전 총리의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및 사고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생각의 변화 등 청취 -탈핵 및 대안적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한 간 전 총 리와 정의당 등 야3당 관 계자의 의견 교환	
2014-10-15	중앙당 회의실	제4차 연구소 이사회	-2014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의결 -연구소 시행세칙 제정 -기타	

주제 : 당 발전전략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기간 : 2013년 10월 10일 - 2014년 06월 30일(8개월 2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정치의 성장을 꺾이기 위해 조직(과 제도)에 대한 혁신적 전략과 아울러 담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정치(사회)심리학, 인지과학, 네트워크 과학에 의거하여 진보정당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프레임을 구축한다.
- 연구성과 : 새로운 전략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됨. 공감(공생)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진전과 관심의 증대는 진보정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됨. 선언의 정치가 아닌 울림의 정치를 위해 공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알게 됨.

**주제 : 2014년 스웨덴 총선과 2015년 영국총선,
2016년 한국총선이 갖는 함의**

- 연구기간 : 2014년 03월 11일 - 11월 10일(9개월 0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세기 오랜 집권세력으로 활동하면서 복지국가모델을 수립한 스웨덴의 사민당과 영국의 노동당의 사례에서 현재 어떤 정책적 이슈들을 발굴, 제기하고 있으며 어떤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또 어떤 전략하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진보정당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연구내용 : 유럽의 두 정당의 생성에서부터 집권까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사례에 대해 살펴봄.
- 연구성과 : 한국의 국가전략의 서구 거대 좌파정당의 정책을 참고하되,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기반해야 함.

주제 : 21세기 한국형 사민주의의 비전과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년 03월 27일 - 09월 04일(5개월 0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유럽의 사민주의를 표방한 여러 정당의 사례에서 한국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여 정의당이 추구하는 상생의 정치, 즉 불평등과 불공정, 불안, 피로, 실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평등과 공정, 안정, 여가, 희망이 넘쳐나는 사회로 전환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고 일과 삶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사회로의 전환, 사회 정의에 입각한 상생의 복지국가 실현, 경제민주주의, 사회적·생태친화적 경제체제를 수립,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의 혁신 및 지역사회의 생태전환을 추진, 정치혁신과 행정개혁은 민주, 평화, 복지의 추동력임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의 협력,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주도하고자 함.
- 연구성과 : 진보정치의 국가비전을 세우고 사회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추구하는데 노력한다.

주제 : 스웨덴 사민당의 선택과 정치전략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4년 04월 07일 - 10월 06일(6개월 0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발발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확산으로 90년대 이후 각국정부를 지배를 ‘자유시장, 작은정부’지향의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임. 한국의 경우 거대정당의 힘겨루기와 당 리당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소수정당들이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양대정당을 압박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입안과 새로운 사회연대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연구내용 : 스웨덴 사민당의 성장과정과 정치적 선택, 사민주의 정치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를 역사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실현되는지 등을 살펴봄. 또 민주화과정부터 복지국가 형성기까지 스웨덴 사민당에 의해 구축된 사민주의적 정치질서는 사회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봄.
- 연구성과 : 사민주의적 정치, 경제, 사회질서는 성장과 평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적 통제, 관료적 위계질서와 공동체적 인간존엄을 동시에 추구한 창조적 정책 아이디어에서 촉발되었으며, 적극적인 계급타협과 지지의 확대를 통해 이를 현실화할 수 있었던 스웨덴 사민당의 정치적 힘에 의해 구축됨.

주제 : 지방선거제도 개편 관련 동향과 정의당의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01월 06일 - 01월 08일(0개월 0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동향을 짚어보고 정당공천 폐지시 문제점을 제기.
- 연구내용
 - 각당의 기초의원 정당공천 관련 입장 및 주요논거
 - 정당공천제 관련 선행연구자료 검토
 - 국회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정의당의 입장
- 연구성과
 - 정당공천제 관련 당론의 기초를 만들고 정개특위 논의시 당의 입장으로 반영.

주제 :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02월 01일 - 02월 1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함.
-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의미
 - 현행 지방재정위기관리시스템 분석
 - 외국의 지방정부 파산제
 -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의 문제점
 - 지방정부 재정위기 관리의 대안
- 연구성과
 - 지방정부 파산제와 관련한 당론을 입안하고 언론기사 반영, 라디오인터뷰 등을 통해 정의당의 정책을 홍보.

주제 : 국회 정치개혁특위 현황과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02월 10일 - 02월 12일(0개월 0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 결과와 각 당의 입장을 분석하고 정의당의 대응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논의결과 분석
 - 각 당의 정당공천제 관련 입장
 - 선거법 개정에 따른 각급 당부 및 예비후보들의 유의사항
- 연구성과
 -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선거대응에 활용

주제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주요의제와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02월 01일 - 02월 26일(0개월 2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다뤄질 주요의제를 분석하고 정의당의 대응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요의제 내용과 문제점
 - 각 의제별 정의당의 입장
- 연구성과
 - 당 소속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 대상 브리핑, 특위 논의과정에 질의를 통해 반영.

주제 : 201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정세 전망

- 연구기간 : 2014년 1월 1일 - 1월 9일(월 9 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 벽두, 한 해의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의 정세 전망을 통해 남북관계 현상 타파 및 진전을 통한 통일의 기반 구축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 당 활동의 조건과 실천 방향 제언

○ 연구내용

- 북의 신년사 주요 내용과 한국 정부의 반응
- 박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중 평화-통일 분야 주요 내용과 비판적 평가
- 신년 초 일본과 중국의 움직임
- 향후 남북관계 간략 전망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원들에게 북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남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중 평화-통일 분야의 내용, 주변국의 움직임 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당 대응방향 등에 대한 제언 등을 통해 당론 형성에 기여

주제 : 역사·영토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평화·공생의 공동체'를 향해

- 연구기간 : 2014년 1월 12일 - 2월 12일(1월 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동아시아의 복합적 갈등 상황이라는 현실에 맞서 과거사 정리를 씨줄로, 동아시아의 평화공생 공동체 건설이라는 미래 설계를 날줄로 해결대안을 모색할 필요성 주장
- 연구내용
 - 아베의 과거사 합리화-군사적 역할 확대 정책에 맞서, 박근혜 정부가 과거사와 군사협력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의 문제점
 -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제언과 비전
 - '동아시아 평화·공생 공동체'를 위한 제언과 비전
 - 보론) 노무현의 혼선, 하토야마의 좌절의 원인과 교훈
- 연구성과 : 노회찬 전 대표를 통해 일본 사민당 등과의 좌담회에서 발표되고 상당한 공감을 형성함.

주제 : 정부조직법 개편

□ 연구기간 : 2014년 09월 01일 - 09월 1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4.16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조직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음. 당은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의 조직개편을 도모해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9월까지 제출된 국가조직법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과 논쟁점을 정리함. 이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국민안전부 신설, ② 상설경계조직 활성화, ③ 재난 관련 기금 및 특별교부세 배분권 조정 ④ 독립·합의형 기구로서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⑤ '인사·조직개혁특별위원회' 설치 ⑥공직자 윤리법 관련, 이해관계 충돌 심사제 도입 및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 연구성과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무원윤리법 개정

- 연구기간 : 2014년 09월 10일 - 09월 26일(0개월 1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4,16 세월호 이후 관료들의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윤리법 개정안이 제출되기 시작했음. 이에 당의 입장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공무원들의 소위 '관피아' 문제에 대해 현상을 분석하고, 9월까지 제출된 공무원 윤리법 개정안들을 검토함. 관피아 현상을 '민간유착'으로 정의하고 이것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함. 특히,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연구성과

-공무원윤리법 개편 관련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기업 개혁 방안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01일 - 10월 14일(0개월 1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기업 개혁 및 퇴출제도를 추진함에 따라, 이를 분석하고 당의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공기업의 부채 및 방만경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여당의 개혁 방안을 검토함. 나아가 정부 및 여당의 무조건적인 부채축소식 퇴출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무엇보다 부채의 원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선행되어야 하며, 질적평가 및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성 제고방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

○ 연구성과

-공기업 개혁 관련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국민안전처 현황분석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5일 - 10월 29일(0개월 1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정부가 10월 차관급 조직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기존 안행부를 행자부로 개편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의 입장을 검토함.

○ 연구내용

-차관급 조직 신설에 따른 부처의 독립성 및 권한한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장관급 조직인 국민안전부 신설을 제안함.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계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직위분류제로의 개편을 통한 재난안전직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함.

○ 연구성과

-국민안전처 신설 과 안전문제에 관련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개방형 임용제 분석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01일 - 11월 12일(0개월 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한국관료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도입한 개방형임용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킴에 따라, 이를 분석하고 향후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연구내용 - 개방형 임용제 도입 배경 및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함. 특히, 직위분류제를 바탕으로 고위공무원단이 도입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의 운영의 한계를 지적함. 향후 전문성있는 관료 운영을 위해 현행 행정고시제도 개혁 및 직위분류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함.○ 연구성과 - 개방형 임용제 및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무원 연금개혁 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01일 - 12월 12일(0개월 12일)
- 연구분야 : 행정자치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설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의 입장에 반영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제의 성격을 분석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적 고려가 배제된 있음을 지적함. 나아가 공무원 연금은 비단 하나의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단적 성격을 강조하고, 향후 관료제 전반의 개혁 선상에서 공무원 연금이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함.

○ 연구성과

-공무원연금 개혁 및 인사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1월 정치 정세전망 - 정치메세지와 개헌대응

- 연구기간 : 2014년 1월 7일 - 1월 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월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국회 비회기로 정치인들은 외유, 휴가 등 1년을 준비하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음. 비회기 중임에도 지방선거제도를 둘러싼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공방 진행. 1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정안 확정이 예정되어 있음. 문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여부임. 새누리당은 유지, 정의당 유지, 통합진보당 유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폐지의 입장. 논의 진행을 봐야 하겠지만, 현재의 시간 제약, 각 당의 이견 등 정치상황으로 볼 때, 정당공천 유지의 가능성이 높음. 개헌 논의가 점화되었음. 강창희 국회의장은 5월까지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하였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월 중순에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임. 민주화 이후 개헌 논의는 수 차례 있었으나 번번히 논의만 무성하다가 폐기되었음.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만 무성할 가능성 높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2월 정치 정세전망- 지방선거 대응과 관리

- 연구기간 : 2014년 2월 11일 - 2월 13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월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국회 2월 임시회 회기 중임. 2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기선잡기 입법 주도권 경쟁 돌입. 여야 모두 밀릴 수 없는 공방으로 정치갈등이 심화. 주요 쟁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논란, 기초노령연금, 북한인권법 등이 될 것임. 개헌 이슈는 지방선거 이슈에 밀려 잠복 상태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사법의 정치화

- 연구기간 : 2014년 2월 13일 - 2월 20일(7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사법의 정치화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개혁은 정당정치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함. 정치적 쟁점을 사법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 내에서 쟁점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함. 대의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정당체제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사법의 정치화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연구소 블로그 게시 및 연구소 자료로 활용

주제 : 3월 1~2주차 정치 정세전망- 정계개편과 제도적 대안

- 연구기간 : 2014년 3월 4일 - 3월 6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3월 1~2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국회 3월 휴지기. 3월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위원장이 기초단체장과 의회 무공천 합의를 바탕으로 전격적인 제 3지대 신당 창당을 선언.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둔 정국이 요동치고 있음. 새누리당은 그동안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야권분열에 따라 무난한 지방선거 승리를 예상했으나 통합신당 창당으로 일격을 당한 상황. 3월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창당' 정치와 새누리당의 야권의 정국 주도권 분산 및 정지 전략이 정면 충돌하는 시기가 될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3월 3~4주차 정치 정세전망- 지방정치와 제3대안세력

- 연구기간 : 2014년 3월 19일 - 3월 21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3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국회 휴지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 격차 확대. 박근혜 대통령, 지방선거 및 이후 집권 안정화, 성과 만들기에 집중. 새누리당, 중진차출론 관철, 경선롤을 둘러싼 불협화음. 새정치민주연합, 3월 내 창당 완료. 통합진보당, 지역별 지방선거 후보자 출마선언 중. 87년 민주화 이후 당시 다당제가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3김과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유지되었지만, 3당 통합과 DJP 연합으로 양당제가 강화되었음. 그러다가 16대 총선부터 상대적으로 다시 다당제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19대 총선 이후,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양당제가 재강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4월 1~2주차 정치 정세전망- 지방선거와 골목복지 체제

- 연구기간 : 2014년 4월 2일 - 4월 4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월 1~2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4월 임시국회 개의 중. 지방선거 판세, 새누리당 7곳 우세, 민주당 6곳 우세, 4곳 경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수도권 내부 경선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의원 리더십을 확보하여 정채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 반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박근혜 대통령, 60% 초반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 유지, 규제개혁 7시간 생방송, 핵안보정상회의, 독일 순방 중 ‘드레스덴 선언’, 북한 NLL 사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등을 통해 새누리당 지방선거 측면 지원. 새누리당, 내부 교통정리 종료, 4월 5일부터 경선 돌입 예정. 새정치민주연합, 통합효과가 가져온 초기 높은 지지율이 불과 한 달만에 반도막, 친노배제, 정채성 논란 등 내부 불협화음과 기초선거 무공천 딜레마 등으로 지지율 급락. 통합진보당, 현재까지 460여명 예비후보 등록, 정책 차별화 통해 지방선거 생존 모색.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4월 3~4주차 정치 정세전망- 세월호 참사

- 연구기간 : 2014년 4월 16일 - 4월 18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4월 임시국회 종료. 각 당 본격적인 지방선거 당내 경선 돌입.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도 앞바다에서 승객과 승무원 475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하였음. 불의의 사고로 18일 현재까지 사망 28명, 실종 268명 발생. 대규모 인명 피해의 우려.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실종자들이 생환을 기원하고 있음. 여야 지방선거 중단.-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판세, 새누리당 7곳 우세, 민주당 5곳 우세, 5곳 경합. 박근혜 대통령, 여전히 60% 초반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 유지,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북한 추정 무인정찰기 문제 대응으로 지방선거 측면 지원. 긴급하게 발생한 '세월호' 침몰로 정부 책임의 후폭풍이 거셀 것임. 새누리당, 당내 경선 중반을 넘어서고 있음.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로 전략 선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에 집중. 통합진보당, 물·가스·전기 무상시리즈 등 차별화 정책 부각.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4주차 정치 정세전망- 팟캐스트 효과와 7.30재보궐 대응

- 연구기간 : 2014년 6월 25일 - 6월 27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6월 임시국회.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7·30재보선 예정. 지방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압승은 아니더라도 근소한 승리로 종결, 새정련은 ‘세월호 참사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패배. 박근혜 대통령 안대희, 문창극 등 연이은 총리 후보 지명자 낙마,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는 희대의 코메디로 통치력 누수 심화.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인 총리 및 내각 교체 과정의 안이하고 무능한 접근으로 전관예우 논란의 안대희가 낙마한데 이어 친일발언 과문으로 문창극까지 낙마하는 인사 뒷에 빠졌음. 결국 악수 중의 악수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오기 정치를 보여주고 있음. 여론조사 다수의 결과에서 국정 지지도의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을 앞서고 있음. 언론 미디어의 지방선거 평가 대상에서 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는 진보세력의 처절한 패배였음. 분열과 이념적 폐쇄성, 리더쉽 부재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 7·30 재보궐 선거에서 얼마큼 성과를 남기느냐가 향후 정치과정에서 활로 모색의 길잡이가 될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연구

- 연구기간 : 2014년 7월 1일 - 8월 29일(2개월)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방향과 과제 제시
- 연구내용 : 현재 한국 현실이 사회민주주의가 발전된 서구 사회와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개념을 창출할 필요. 정의당은 한국형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으로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실현’, ‘평화로운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추구’, ‘공존공영의 세계사회에 기여’, ‘광범위한 경제민주화 복지연대’ 등을 논의. 이런 논의 속에서 한국형 사회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전략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국가비전 및 신강령제정위원회 자료로 활용

주제 : 국회개혁

- 연구기간 : 2014년 8월 20일 - 9월 4일(0개월 00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방향 검토
- 연구내용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유지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철폐야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은 국민들에게 기득권, 특권 집단으로서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이 ‘한통속’, ‘방탄국회’라는 사실을 재확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안.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하였음
- 연구성과 : 당의 법안 발의에 반영

주제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정의당 위헌소송

- 연구기간 : 2014년 9월 22일 - 10월 2일(10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정의당의 위헌소송 진행사항 점검
- 연구내용 : 2014년 1월 20일 정의당 차원에서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진행 점검과 대응 검토
- 연구성과 : 정의당 내 정치특별위원회 기본 자료로 활용

주제 : 9월 4주차 정치 정세전망- 복지, 증세 논쟁과 개입

- 연구기간 : 2014년 9월 22일 - 9월 24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9월 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대치 정국 지속. 담뱃값 인상,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려는 정부여당과 이에 대립하는 야권 사이에 날선 공방 진행. 국회는 의장이 의사일정 강행을 예고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파행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법 제정 거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20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미국 방문.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특별법 제정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과 야권이 요구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가 무장해제 당한다는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정국과 관련하여 청와대 여의도 지점으로 전략.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및 재보궐 패배 이후 박영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들어섰으나 개인과 당의 리더십과 협상력 부재로 조기 사퇴하고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대체.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양당 정치개혁 의제 대응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일 - 10월 8일(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 불체포특권 제한, 출판기념회 제한, 국회의원의 선거구획정 권한, 의원 세비 동결,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원 정수 축소, 개헌 등 정치개혁 의제를 검토, 정의당의 대응 방향을 제시
- 연구성과 : 당 상무위원회와 정치특별위원회 검토 자료로 활용

주제 : 10월 3주차 정치 정세전망- 국정감사 대응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2일 - 10월 14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월 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야 대치국면 일단락. 그러나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가족대책위원회가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함.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일단락 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10월 7일(화)부터 27일(월)까지 국정감사 돌입.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야권의 박근혜 정부 몰아 붙이기 호기이자, ‘야당의 무대’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오판과 계파갈등, 박영선 리더십 붕괴의 후과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정의당은 5명의 의원이 연일 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음.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권력 핵심 3인방이 참석. 한반도에 해빙의 기운이 찾아오는 듯 했으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해와 연천 등 NLL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교전 발생.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0월 5주차 정치 정세전망- 핵심 지지층 확대와 생활밀착형 대안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27일 - 10월 2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월 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10월 7일(화)~27일(월)까지 진행되었던 국회 국정감사 종료. 29일(수) 정부 내년도 예산안 편성관련 대통령 시정연설, 30일(목)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31일(금)부터 대정부 질문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6인과 회동.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예결산,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정부조직법 개편, 유병언법, 김영란법, 담뱃값 인상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격돌 예정. '개헌'에 대해 새누리당-청와대, 친박-비박 갈등,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존재감 부재의 딜레마, 양당 정치혁신위원장 회동 예정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정치혁신 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5일 - 11월 3일(19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혁신 과제 제시
- 연구내용 : 정치 다양성 확보, 정치개방성 확대, 정치 투명성 강화, 국회 개혁 등 정치혁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
- 연구성과 : 당 정치폭바로특위 검토 자료로 활용

주제 : 선거제도 및 개헌 대응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27일 - 11월 3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선거제도 개혁 및 개헌 방향에 대한 검토
- 연구내용 : 거대 양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비판, 개헌 이전에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하는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개헌’ 혹은 ‘선 거제도 개혁 및 개헌 동시 추진’을 제시
- 연구성과 : 원내대표 연설 및 정치특별위원회 자료로 활용

주제 : 11월 1~2주차 정치 정세전망-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대응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10일 - 11월 12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1월 1~2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정기국회 회기 진행. 예산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담뱃값 인상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격돌 예정.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정부, 세월호 수색 종료 선언. 헌법재판소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87년 민주화 이후 선거제도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국면, 2015년 하반기까지 논란 지속. 각 당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두고 정치적 후폭풍 예의 주시. 새누리당 10명, 새정치연합 26명 여야 국회의원 '개헌' 특위 구성 결의안 제출, 개헌의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개헌 담론 정국 형성.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선거제도 개혁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19일 - 11월 26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년 10월 30일(금) 14시 헌법재판소,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인구 편차 3: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 대응방안 검토
- 연구내용 : 선거제도 대안의 우선선위로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100명 이상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등을 제시
- 연구성과 : 정의당 정치특별위원회 검토 자료로 활용

주제 : 11월 3~5주차 정치 정세전망- MB 자원외교 문제 대응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26일 - 11월 28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1월 3~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정기국회 회기 중. 12월 2일 예산안 통과 마지노선을 두고 여야 대치 심화.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확보, 담뱃값 인상 등 현안을 두고 격돌. MB자원외교 문제 정치 이슈화 되고 있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2월 2~3주차 정치 정세전망- 4대강 사업 및 선거제도 개혁 대응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10일 - 12월 12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2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국회 임시회 중. 지난 2일 종료된 정기국회를 통해 12년만에 예산안 기한내 국회 통과. 쟁점 법안을 두고 임시회 개최. 정윤희 문건 유출로 불거진 국정농단 이슈화. 사자방 국정조사와 특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음. 10일(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2 회동을 통해 민생경제 법안,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회특위 연내 구성 등을 합의했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기초단위 무공천 방침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4년 03월 09일 - 03월 18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초의회 정당공천 이후 지방의회의 달라진 양상을 분석해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위 무공천 방침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
- 연구내용
 - 역대 지방선거 당선자 분석
 - 정당공천 이후 기초의회 운영실적 분석
 - 정당공천시 해법
- 연구성과
 - 기초단위 정당공천 도입 효과 분석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기사 반영 등을 통해 정의당의 당론을 홍보.

주제 : 정치권의 기초공천 논란 배경과 시사점

- 연구기간 : 2014년 03월 19일 - 03월 20일(0개월 0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각 당의 기초공천 관련 논의 현황을 분석하고 당의 대응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 각 당의 기초공천 관련 내부 논의 현황
 - 정의당의 기본입장 재확인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당론을 확인

주제 : 지방재정 위기 현황과 대안

- 연구기간 : 2014년 04월 01일 - 04월 04일(0개월 0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재정 위기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진보적 대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공기업 채무 등 각종 지방재정 관련 지표 분석
 -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분석
 - 정의당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당론에 반영

주제 : 국제비교를 통한 선거구제 검토

- 연구기간 : 2014년 06월 11일 - 06월 14일(0개월 0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각 국의 의회 선거제도를 분석, 비교하고 정의당의 의회 선거제도 대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선거제도의 구분
 - 소선거구제와 복수당선제
 - 중대선거구제 주장에 대한 검토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에 공유하여 당론형성에 반영

주제 : 지방세수 분석과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09월 22일 - 09월 24일(0개월 0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세수 결산 분석을 통해 지방세수 감소 원인을 살펴보고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
- 연구내용
 - 2013년 지방세수 분석
 - 안전행정부 지방세제 개편방안의 문제점
 - 지방재정 위기 극복방안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당론에 반영

주제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당의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0일 - 10월 13일(0개월 04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당의 대응방향을 모색.
- 연구내용
 -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의 주요 논거
 - 교육계의 입장
 - 교육감 직선제 경과와 해외사례 분석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당론에 반영

주제 : 누리과정 예산논란과 지방교육재정 현황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1일 - 10월 13일(0개월 03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논란의 배경을 짚어보고 당의 대응방향을 모색.
- 연구내용
 -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지원 관련 입장과 논거
 - 정부·여당의 입장
 - 지방교육재정 및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당의 입장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당론에 반영

주제 : 담뱃세 인상이 지방재정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2일 - 10월 13일(0개월 0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담뱃세 인상이 지방재정 확충,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세수 결산 분석을 통해 지방세수 감소 원인을 살펴보고 당의 입장을 제시.

○ 연구내용

- 담뱃세 인상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담뱃세 인상 관련 당의 대응방향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당론에 반영

주제 : 긴급재정관리제도 문제점과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26일 - 10월 30일(0개월 05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
- 연구내용
 -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 재정위기관리제도와의 차이점
 - 지방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적 대안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당론에 반영

주제 : 정부조직법 쟁점과 검토의견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21일 - 10월 31일(0개월 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의당의 대안을 모색.
- 연구내용
 - 정부조직법 쟁점 분석
 - 각 쟁점에 대한 판단
- 연구성과
 - 의원총회에 제출하여 당론 투표 및 본회의 반대토론 과정에 반영

주제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방안 검토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01일 - 11월 04일(0개월 0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주장의 논거를 살펴보고 타당성을 분석.
- 연구내용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주장의 배경
 - 소방공무원의 신분 변화 과정
 - 소방공무원 현황
 - 정의당의 대응방향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의원총회에 공유하여 당론에 반영

주제 :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편성 논란과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10일 - 11월 12일(0개월 03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관련 논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당의 입장을 제시.
- 연구내용
 - 무상급식, 무상보육 관련 갈등 현황과 원인
 - 정의당의 기존 입장 재확인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당론에 반영

주제 : 누리과정 합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25일 - 11월 27일(0개월 03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누리과정 보육예산 관련 여야 합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복지재정 부담의 필요성, 정의당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
- 연구내용
 - 누리과정 보육예산 관련 여야 합의의 문제점 분석
 -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충돌지점
 - 국가와 지방의 재정분담 방안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광역시도당 등 지역조직에 공유하여 당론에 반영

주제 : 선거제도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22일 - 12월 22일(2개월 0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배분에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내용

- 각국의 의회선거제도 분석
- 기존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혁방안 제시

○ 연구성과

- 정의당 정치특별위원회 정치개혁안 자료집에 반영.

주제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내용과 문제점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01일 - 12월 09일(0개월 09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주요과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함.
- 연구내용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핵심과제 주요내용 분석
 - 일반과제 및 미래발전과제에 대한 입장 정리
- 연구성과
 -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박원석 위원) 전체회의 질의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의견 전달. 정책논평을 통해 언론기사 반영.

주제 : 생태사회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

- 연구기간 : 2014년 2월 24일 - 3월 26일(1개월)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경과와 생산·분배·생태적 측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생태사회전환의 필요성,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함.

○ 연구내용 :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의 본질은 ‘자원의 무한함을 전제로 과학기술과 다국적기업이 유착한 생명파괴’이다.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존 법칙)을 토대로 한 근대 과학기술은 물질변환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며, 생산지향성이 강한 과학기술이라는 점에서 생태계 파괴, 생명파괴를 고려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생태계·환경과 먹거리 안정성 등 건강문제 그리고 생명과 관련되는 현상의 세계는 가역적인 현상이 아니라 불가역적인, 변화를 거치면 다시 원래 또는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대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사회전환의 방향으로 ① 새로운 국가의 역할 모색이 필요함. 생활의 질 보장, 사회보장, <천형(踐形)> (사람다움의 실현), <Association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보장. ② 생태·환경과 인간의 친화성 강조 : 엔트로피(Entropy)를 토대로 자연과 인간의 공생(Fair Relationship)을 통한 지역순환형 사회 창출. ③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자유의 보장」으로 : 「국가」 대신에 「개인의 자유의 연합」으로, Association·Coop 등에 의한 자치와 자립이 필요하다. 생명활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본질은, <물질순환>이다. 엔트로피(Entropy) 법칙으로 해명된다. 이제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존재의 지속 가능성 추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연구성과 : 소속 의원의 입법 및 정책 자료로 활용

주제 : 생태사회전환과 어소시에이션

- 연구기간 : 2014년 3월 27일 - 4월 1일(6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자본주의 공업화경제성장의 국가주의적 속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는 한편, 엔트로피 법칙에 근거한 사회경제 조직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보다 풍부한 자유를 창출하는 것에 '성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나라를 만들겠는가'는 '국가주의적 공약'이 아니라 개개인의 '어소시에이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친 세계자본주의는 '포디즘'이라 불리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형성했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칭송과 함께 풍요사회의 물질욕망 구조를 창출했으며, 197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파괴와 공해 문제를 낳았다. 이로 인한 " '살아있는 계'인 농산물 생산, 생태계의 '균형' 파괴문제나 환경파괴 문제, 물질의 열화(劣化)·오염 등의 문제는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대 법칙)'으로 다뤄야 한다. '엔트로피 증대 법칙'이란 물질이 활동하거나 변화하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양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역사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조적 원리와 문제점, 자본주의 공업화 경제성장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 물질적 풍요와 인간의 물질욕망 속성, 생태환경의 파괴에 대한 통찰을 필요로 한다. '어소시에이션' 개념은 "자기통치(autonomous)적이고 자발성(voluntary)을 토대로 한 운동체, 협동조직이다.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는 '어소시에이션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연구성과 : 소속 의원의 입법 및 정책 교육자료로 활용

주제 : 독일사례로 본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육성

- 연구기간 : 2014년 3월 11일 - 4월 9일(1개월)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재생가능에너지산업선진국인 독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 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연구내용 : 1998년 출범한 독일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은 독일 에너지정책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였다. ‘적녹연정’은 1999년 1월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중단하고, 재처리를 2000년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 개정에 합의했다. 그 뒤 정부와 산업체가 협의회를 개최해 2001년 6월 합의를 발표하고, 2002년에 그것이 법제화되었다. 그 결과 2021년에 마지막 원자력 발전이 가동중단하게 되었다. 또한, ‘적녹연정’은 환경세 도입, 재생가능에너지 법(EEG) 제정, 10만호 태양광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2002년 이러한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총괄을 경제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행정시스템 개혁을 단행했다. 2002년 이후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정책은 환경부가 총괄,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확대에 필요한 전체 정책을 입안하고, 개별 에너지원별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기금 배분하며,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 평가도 담당한다. 현재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앞에서 설명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금융 융자제도를 통해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 전환이 실현되고 있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현황과 정책사례

- 연구기간 : 2014년 4월 10일 - 4월 16일(6일)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현황과 정책사례를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독일에서는 2012년 현재 총 전력소비량의 22%(2013년 25.4%)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그 세부구성 내용을 보면, 태양광 4.5%, 수력 3.4%, 바이오매스 6.6%, 풍력 7.4%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기여는 바이오매스 40.2%, 풍력 28.2%, 태양광 14.5% 순이다. 2012년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종사자는 총 377,800명이며, 재생가능에너지법(EEG)에 의해 직접 창출된 일자리 수도 2012년 현재 268천개이다. 독일의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와 90년대의 재생가능에너지매입법, 2000년 제정된 재생가능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Gesetz)에 의한 것이었다. 현재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1990년의 40%, 2050년까지 80%를 줄이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총 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을 2020년까지 18%, 2050년까지 60%로 올린다는 목표를 겨냥하였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국내 전력시스템 개혁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3월 24일 - 4월 23일(1개월)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내 전력시스템의 수급구조 및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전력시스템 개혁의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연구내용 : 원전확대론의 문제점은 수요측면에서 ▲저평가된 원전의 발전단가 때문에 전력수요 증가를 지속시키는 점, 공급측면에서 ▲장거리 송전망 건설의 불확실성 ▲수도권의 장거리 송전망 사고 위험성 ▲장거리 송전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성 ▲특정지역에 집중된 원전의 과도안정도로 인한 수급불안정 증대이다. 또한, 에너지전환론의 문제점은 수요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 ▲과도한 열 및 난방 에너지의 전력화와 수요증가 ▲공공성 강조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반대, 공급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고립전력망이라는 점과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 변동성으로 인한 비상수급문제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력 수요문제는 열이나 난방에너지로, 유류가 아닌 전력을 사용해 에너지효율이 반 이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전력공급 문제는 원전과 화력발전 중심의 장거리 송전체계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풍력발전 자원은 제한적이며,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이 태양광, 풍력에 편중된 반면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도는 극히 낮다. 또한, 유럽의 국가간 전력망 연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립전력망이라는 조건하에 있다. 수요측면에서 원전의 숨은 비용을 발전원가에 반영하고 등유에 대한 에너지세 부과를 낮추고, 반대로 발전용 석탄에 에너지세를 과세하는 에너지세제 개편, 꾸준한 전기요금 현실화 인상이 필요하다. 수요측면의 정책과제 실현과 함께 공급측면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현실적 대안은 천연가스 발전이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천연가스 발전 징검다리론과 RPS개혁

- 연구기간 : 2014년 4월 24일 - 4월 29일(6일)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천연가스 발전 징검다리론을 검토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RPS제도개혁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천연가스 발전은 원전/장거리 집중형 전력시스템을 재생에너지/근거리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바꾸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원전 중심의 발전보다 천연가스 발전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체제로 전환하는데도 유리하다. 원전 확대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에 대해 진보진영도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 전력소비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독일의 25.4%(2013년)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고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 기술적 수준과 경제성 측면에서 저발전 단계에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2년 7월 RPS제도를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전환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구매하는 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 후퇴정책은 그동안 RPS에 의한 과징금 부담을 호소해온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한 RPS 의무공급비율 축소나 확대기간 연장은 그렇지 않아도 뒤쳐진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여러 여건상 RPS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일본처럼 FIT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농업·농촌정책의 개혁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4월 1일 - 4월 30일(1개월)
- 연구분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내 농업·농촌의 현실에 맞는 정책과제를 검토함으로써 대안적인 농정비전을 수립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국내의 먹을거리와 농업농촌의 현실은 “국가행정시스템과 시장경제 시스템에 의한 ‘식생활세계의 식민지화’ 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생산·소비 상생·협동·연대를 통한 식(食)의 주권 회복 운동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식량자급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폭넓게 그리고 힘 있게 전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한 ‘식(食)의 주권 회복 운동’은 생태과괴적인 고투입·고에너지 농법과 기업식 대규모 농업을, 생태친화적인 농법과 가족농이 살 수 있는 농업으로 교체하고, 식(食)과 농(農業)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농맹자, 식맹자에 대항해 우리의 먹을거리를 안정되게 공급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존립, 자연과 생태환경의 유지, 전통과 문화의 보존 등의 문제는 농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식(食)과 농(農業)을 위한 10가지 이정표를 제시했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정개혁 및 쌀 관세화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5월 2일 - 5월 7일(6일)
- 연구분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농업농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농정개혁, 특히 쌀 관세화에 관한 정책대응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식량 해외의존도는 2012년 76.4%로 먹을거리의 자급력과 다양성, 안전성이 모두 우려되고, 2013년 171만 ha인 농지면적은 2023년에는 140만 ha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와 국제곡물가격 등을 감안한 약 160만 ha에 못 미친다.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도 2013년 5.7%에서 2023년 4.4%로 전망되며, 2013년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36.7%에 달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2.2%의 3배가 넘으며, 농업경영주의 37.7%가 70세 이상 이고, 평균 연령은 65.4세이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8년 65.2%에서 2012년 57.6%로 감소했으며, 농산물 판매액이 1천 만원을 넘지 못하는 영세농가가 전체의 65.3%를 차지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빈곤선 아래의 농가 비율은 2012년 22.5%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농정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쌀 자급률 하락은 우리 식탁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고급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은 전체 쌀 무역량의 2~3%(약 70만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중국, 미국, 호주, 이집트 등 자포니카 쌀 주요 수출국들의 농정기조(수출통제 등)나 작황에 따라서 자포니카 쌀의 무역량 감소와 가격폭등의 개연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관세화 논란 재연 이전에 쌀 자급률 하락에 따른 위험과 쌀 자급률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7월 14일 - 8월 13일(1개월)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원순환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정리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현재 우리나라 자원순환정책은, 우선,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과대 추정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경우 농축산부와 환경부가 중복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신재생에너지에서 바이오에너지(식품폐기물과 가축분뇨)와 폐기물 에너지 비중이 줄었다. 자원순환 정책수립과정의 핵심적인 과제는 순환자원을 규제대상인 폐기물로만 간주하고 있어 개별 품목별로 규제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를 ‘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리’ 순으로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법 아래 개별법으로 식품폐기물 등을 물질의 특성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
- 연구성과 : 소속위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국내 자원순환의 현황과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8월 14일 - 8월 19일(6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내 자원순환 현황과 쟁점 및 올바른 정책방향을 요약검토해 정책 입법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1년 3,370만톤을 정점으로 하락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이후 1,800만톤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식품폐기물 발생량(가정+사업장)은 1991년 960만톤을 정점으로 하락하였으나 600만톤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생활폐기물의 59.1%는 재활용되고, 25%는 소각되며, 15.9%는 매립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약 33%를 차지하는 식품폐기물은 처리량(409만톤)의 47.4%(194만톤)는 사료화, 38.1%(156만톤)는 퇴비화, 3.5%는 혐기성 소화를 시키고 있고, 최종폐기물로 7.9%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 분뇨의 경우 이미 2004년 기준으로 자원화율이 8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잔여매립가능량을 당해 매립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우리나라의 폐기물 매립 잔여연수는 17.9년으로 한계에 직면했다.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는, 첫째, 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를 ‘발생억제→재사용→재생이용→열회수→적정처리’ 순으로 분명하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둘째, 유기성 순환자원의 “사료화, 퇴비화 품질이 저조하고, 경종농가의 토양양분 과잉상태로 인해 퇴비와 사료가 원활하게 재생이용되지 않는 점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때 4개 부처(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에 분산되어 추진되었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태양광에 편중된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지원을 개선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평가

- 연구기간 : 2014년 8월 20일 - 8월 28일(6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최경환 장관의 취임 이후 내놓은 일명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최경환 경제팀은 "임금상승 둔화로 「가계소득부진→내수부진」의 악순환 지속", "약 600만명의 비정규직 규모는 근로의욕 저하 야기", "임금정체,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기업성과→가계소득으로 환류 미흡", "기업의 투자행태 보수화가 경제 역동성 저하", "과다한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제약 수준", "빠른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해"라고 상황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별정책은 그러한 상황을 해소하는데 유효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구성됨.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경제주체로서 정부의 당면한 세 가지 과제는 ▲복지지출의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공공투자의 확대 및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및 공공투자 확대임.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마을만들기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9월 1일 - 10월 1일(1개월)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다섯 가지 실패원인은 ▲주민들에 대한 사업 홍보와 교육, 참여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에 2년의 시범사업 기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유형을 정하고(도시형, 농촌형, 도농통합형, 산촌형)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필수적으로 명시해 사업 장벽을 높임 ▲신재생에너지 기술, 특히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에 대한 정보와 신뢰가 부족했음 ▲정부와 주민을 잇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부족했음 ▲경제성 확보방안의 불명확함이었다. 이러한 정책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상향식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마을 사업모델’의 핵심은 종전의 사업모델과 달리 1단계에서 주민들이 직접 공동으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주민들의 합의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1단계의 주민 신청서가 심사를 통과하면 2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외부 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참여조직화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 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 및 정보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마을내 지도자(지역리더) 양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통해 수익성 확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제도적 문제 해결이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정부의 쌀 산업발전대책 개괄과 문제점

- 연구기간 : 2014년 9월 19일 - 9월 25일(7일)
- 연구분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쌀시장 관세화 전환에 따른 쌀 산업발전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 시기 농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정부는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1)고정직불금 조기인상 등 쌀 농가소득 안정대책 2)들녘경영체 확대 등 경쟁력 제고 지속추진 3) 쌀 가공제품 개발 등 쌀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이러한 ‘쌀 산업 발전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계획을 2년 앞당기는 것인데다가,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논 경지면적이 0.83(ha)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고정직불금 인상이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정책은 1997년부터 제기되었던 정책으로 ‘6만호 육성’이 ‘3만호 육성’으로 바뀐 것 이외에 변한 게 없는 만년 재탕 정책이며, 200ha 이상 들녘경영체를 10년 사이에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쌀 생산규모화 정책은 무리하게 의욕만 내세운 정책이다. 실질적인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모든 통상협상에서 ‘쌀의 양허대상 제외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정부가 내놓은 쌀 산업 발전대책의 실효성 부족, 재탕 삼탕식의 대책발표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국내 쌀 산업 보호 등 농업·농촌 희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에너지전환 마을만들기의 국내외 사례 시사점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2일 - 10월 7일(6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참여 정책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인 독일의 유펜마을이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된 것은 괴팅겐 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제간연구센터(IZNE)’의 ‘바이오에너지마을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실패한 이유는 IZNE가 했던 기술 및 사업성 검토,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연구 및 주민교육이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 운영하는 협동조합 같은 조직도 부재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까지 10개의 시범사업(도시형 2개, 도농복합형 2개, 농촌형 2개, 산촌형 4개) 조성, 2020년까지 총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한다는 허황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마을 만들기’ 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최소한 ▲상향식의 주민 참여와 협력 ▲에너지 소비의 감축 ▲지역의 특성 및 지역 자원 활용과 자원 순환 ▲정부의 지원과 경제성 확보이다. 한편, 국내의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에너지는 누구나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발전소는 먼 곳에 대규모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가까이에서 소규모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활동의 주체가 중요하고, 또 교육이 없는 조합원은 1.5세대를 못넘긴다는 경험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사례들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준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세월호 모멘텀을 위한 정치의 역할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일 - 10월 8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16과 다른 대한민국을 위해 세월호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정치활동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상심, 허탈함, 정부 및 국가에 대한 분노를 정당정치가 수렴해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며, 특히 진보정치의 경우 ‘진정성 있고 정직한 정치적 태도’, ‘효능감 있는 정치’, ‘좋은 정치리더의 역할’이 필요함.

- 연구성과 : 공동학술행사에서 발표 및 당 지도부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삼척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0일 - 10월 14일(5일)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강행 추진하고 있는 삼척원전 건설의 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가 삼척시민의 다수의 의견대로 삼척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당초의 삼척원전 유치 신청은 주민의사가 조작된 서명지로 추진된 것임. 둘째, 이번 삼척시민 주민투표 실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의 부대조건이었음. 따라서 이번에 실시된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을 따지기 이전에 그 결과에 담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함. 셋째,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반대 단일후보’ 무소속 김양호 후보가 62.44% 지지로 당선되었음. 넷째, 산업부가 주장하는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국가사무’ ” 주장은 법적 다툼의 쟁점이므로 삼척 주민투표의 법적효력 또한 법적 다툼의 대상임.
- 연구성과 : 소속의원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당원 정치의식 조사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일 - 11월 15일(1개월 15일)
- 연구분야 : 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매년 당원정치의식 조사를 통해 당의 정치 및 정책 활동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약 1500여명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의 대국민 존재감, 당의 정치·조직 활동에 대한 평가, 당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국가비전에 대한 당원 의견, 당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정당가입 경력별, 지역별, 연령별 교차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당원들의 정치의식과 당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에게 이러한 당원의식을 수렴하고 반영한 당 정치활동을 수립하도록 요청함.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의 정치활동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재생가능에너지산업분야의 중소기업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3일 - 12월 2일(1개월)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재생가능에너지산업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R&D 지원은 충분히 받아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 전체를 국산화한 중소기업이 재무제표 상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은행들이 기술을 보고 대출하지 않고 장부만 보고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지역민원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주민들의 기술적 불신과 선입견에 의한 반대가 있었다. 사업 추진을 할 때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하루에 가축분뇨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닥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 없이 보급할 수 있는 20톤 규모의 개별 농가를 대상 보급 사업을 추진해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마을단위 사업을 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농식품부가 2016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액비보조금 제도마련, 바이오가스의 정제 및 분리과정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분리저장과 CNG(압축천연가스)의 에너지화가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의 경제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녹색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독일과 국내의 재생가능에너지분야 중소기업 정책비교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3일 - 12월 8일(6일)

□ 연구분야 : 정무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독일과 국내의 재생가능에너지분야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를 통해 국내 정책의 개혁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역 차원에서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주 차원에서 신용보증은행, 전국적으로 국영산업은행(KfW)이 담당하는데, 저축은행은 기업에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을 공급하고, 신용보증은행은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보증지원을 하며, 국영산업은행(KfW)은 장기 저리의 대출로 에너지산업 투자지원을 한다. 그 밖에 국영산업은행(KfW)이 관리하며 낙후지역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에게 저리 융자로 투자하는 ERP펀드가 있고, 주 정부가 주주인 주 산업은행을 통한 저리 융자와 보증 등 금융지원 제도도 있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에 힘입어 가치사슬 전(全) 단계에 걸쳐 높은 기술 수준의 기업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유기적인 분업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독일 기업 중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상위 1,500개 기업 중 1,350개가 소기업 혹은 중간규모 기업이다.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성장한 주요 배경은, 정부에 의한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및 시장 형성 지원 정책'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수요측면의 견인'이며, 결정적 계기는 1990년 제정된 '전력발전차액지원법'을 발전시킨 '2000년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이다. 정부의 기술개발 연구지원, 다양한 금융지원이 부수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 지원정책'→ '수출확대 지원정책'→ '기술축적 R&D정책'→ '시장형성 확대 정책'의 순환구조로 이들 산업이 성장했다

○ 연구성과 : 소속의원의 입법 및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새해 업무 보고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연구기간 : 2014년 2월 6일 - 2월 10일(월 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연초 국방부 청사에서 실시된 외교-통일-국방 3부와 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이해 제고와 당의 대응에 이용

○ 연구내용

- 외교부, 압박에 초점을 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접근법 제시
- 통일부, 통일대박론 확산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등 천명
- 국방부, '일전불사' 전투의지 고양과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등 강경책
- 총괄 평가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예측되는 상반기 남북관계 전망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원들에게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좀 더 구체화한 외교, 통일, 국방 분야 담당 부서의 업무보고의 내용과 그것이 실천될 관련 정세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향 정립

주제 : **한일 군사협력 추진의 대일-지역 정책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 연구기간 : 2014년 2월 28일 - 3월 13일(월 14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일 군사협력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 민족주의적 감정에 입각한 즉자적 과잉 반응으로 그치지 않고 일본의 우경화를 실제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이냐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의 공감과 확산
- 연구내용
 - 한일 군사협력 추진의 한일 관계 혹은 대일 정책 측면에서의 문제
 - " 지역질서 혹은 동아시아 정책 차원에서의 문제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일괄타결’ 조기 실천의 필요성
 - 핵과 군비통제 등 안보 문제와 사회경제 문제의 동시적 병행을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 연구성과 : 2014년에 다시 추진되고 연말에 가시화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등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데 일조했다고 판단됨.

주제 : 우크라이나 사태, 전망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 연구기간 : 2014년 3월 14일 - 3월 19일(월 6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그 전개과정 및 이후 전망과 함께 동 사태가 러시아와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추적, 분석
- 연구내용
 - 우크라이나 사태의 현재와 전개 과정
 - 우크라이나 사태, 신냉전의 단초, 아니면 크림의 러시아 합병으로 귀결
 - 한반도 비핵화, 나진-하산 협력,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의 악영향
 - 대미, 대중 관계 등 외교 정책과 사회경제 정책 등에서 함의를 높일 필요성
- 연구성과 : 미-러, 독일 등 EU-러의 갈등 증폭 등 국제사회의 핫이슈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해 및 동 사태에서 배울 교훈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이 인지하고, 공감하는데 일조

주제 : 한중, 미중,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연구기간 : 2014년 3월 23일 - 2014년 3월 26일(월 4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헤이그를 무대로 3월 23~25일(현지 시각) 한중, 미중,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26일 오전에 진행된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등의 정세에 대한 이해 및 전망과 제언
- 연구내용:
 - 연쇄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한반도비핵화를 중심으로
 - 강 대 강의 대결 국면 예상되며, 한미일 3각동맹 추진 가능성
 - 강경 대응의 악순환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과 정부의 적극적 인식과 행보의 필요성
- 연구성과: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의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정책적 대응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

주제 :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 주요 내용과 평가 및 제언

- 연구기간 : 2014년 3월 28일 - 2014년 3월 29일(월 2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추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평가하고 당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제언
- 연구내용:
 -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3대 제안의 주요 내용
 - 5.24조치, 전제조건으로서의 북한 비핵화에 대해 약간의 유연성 천명
 - 새롭거나 획기적인 제안 부재, 선비핵화의 엄격한 전제조건 약화는 그나마 다행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제안 부재, 동아시아평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
- 연구성과: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의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와 남북관계 관련 정책적 대응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

- 「주」 1. 이 서식은 A4 규격으로 주제별로 각각 작성하되, 연구·개발내용은 목적·내용·성과 등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2. “연구성과”는 연구물이 소속 정당 또는 정부·정치인 등에 의해 정책으로 채택되는 등 정치·사회에 영향을 미친 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주제 : 시진핑 방한과 예상 의제, 주장

- 연구기간 : 2014년 6월 28일 - 2014년 7월 2일(7월 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7월 3~4일에 있었던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그 의의 및 예상 의제 등을 브리핑하고, 그의 방한에 즈음한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
- 연구내용:
 - 7월 3~4일 방한의 객관적 의의 : 방북 이전의 것으로 선례가 없는 것
 - 한중 정상회담의 예상 의제
 - 단순한 북핵 반대가 아닌 6자회담 재개 등 비핵화의 실질적 해법이 제시되어야
 -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재가동 천명해야
 - 단순 반일연대가 아닌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계기가 되어야
- 연구성과: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의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사전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 발언 및 정책적 대응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

주제 : 전작권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주요 논점과 비판 및 주장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23일 - 2014년 10월 27일(월 5일)
- 연구분야 : 국방/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10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에서의 전작권통제권 전환에 대한 사실상의 무기 연기 합의, 그 주요 내용 및 해당 상황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핵심적 논점 정리, 한미 당국 간 합의의 문제점에 대한 논리적 비판
- 연구내용:
 -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주요 합의사항과 파문
 -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현실적 상황 판단: 공약불이행 맞지만 현 정권내 전환 불가능, 차기 정권에서 이뤄질 수 있는 여론 지형 등 조건 형성 필요
 -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과 현실적 대응책
 - 전작권 전환의 의의 : 친미 대 반미가 아닌 비정상성의 정상화, 한국의 외교안보 위상 제고의 문제
- 연구성과: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의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의 방향 정립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

주제 : 동북아 외교전 치열 전개와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뒤 강경 대처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1일 - 2014년 11월 12일(월 12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2명 석방, 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한국이 외교적으로 다소 고립되는 듯한 상황과, 이에 대비되는 남북 강경대치 국면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대응
- 연구내용:
 - 동북아 외교전 치열 전개 상황과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등 적극적 외교 정책 전개의 필요성
 -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뒤 남의 대대적 호국 훈련 전개와 북의 경고
- 연구성과: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의 해당 정세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정부에 대한 주문 등 정치적 대응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됨.

주제 :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 법률안 제정의 문제점, 파병의 기준과 원칙 등 정립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1일 - 2014년 12월 22일(12월 22일)
- 연구분야 : 국방/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방위원회 통과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법률안의 문제점과 당의 입장 및 대응의 기준으로서 파병의 기준과 원칙,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관점을 정립하고 능동적 대응 주문
- 연구내용:
 - 해당 법률의 종합적 문제점
 - 해외파병법 중 다국적군 파병문제
 - 파병의 기준과 원칙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관점 정립
- 연구성과: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의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동 법이 법사위에서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에 합치하는 지 여부 등에 엄밀히 검토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됨.

주제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평가 및 향후 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2월 12일 - 2월 13일(2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고정성 개념으로 통상임금을 판정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과 향후 입법 과제 도출
- 연구내용
 -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한 통상임금 확대의 효과 검토
 - 이에 대한 양대노총의 입장과 대응 방향
 -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고정성'을 제외한 '일률성'과 '정기성'만으로 정의하여 입법하는 것의 필요성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임금체계 개편안 매뉴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3월 20일 - 3월 21일(2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과제 도출
- 연구내용
 -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주요 내용 요약
 -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정리
 - 주요 임금체계인 연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지점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4년 6월 26일 - 6월 27일(2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당의 입장과 대응 방향을 결정
- 연구내용
 -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주요 내용 요약
 -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정리
 - 주요 임금체계인 연공급의 문제점과 개선 지점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노동시간 단축 법안 내용 검토 및 대안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3일 - 10월 14일(2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동시간 단축 법안 발의 내용의 문제점을 검토
- 연구내용
 -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2013년 도 당정협의를 비교, 주요 내용 검토
 -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과 대응 정리
 - 현 개정안의 문제점과 포괄임금 산정제 검토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의 효과성 검토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28일 - 10월 29일(2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연구내용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요약
 -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정책적 과제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경비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 및 처우개선 방안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11일 - 11월 12일(2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체계 실태 등
 - 처우개선방안
 - 관련 직종의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관련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정부의 노동유연화 확대 정책 및 정리해고 요건 완화 문제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27일 - 11월 28일(2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노동유연화 확대 시도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
- 연구내용
 - 정부의 노동 유연화 확대 정책 주요 내용
 - OECD 고용보호입법지수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정리해고 실태의 심각성
 - 정리해고와 관련 입법, 정책적 과제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정부의 '정규직 과보호론'과 비정규직 보호방안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11일 - 12월 12일(2일)
- 연구분야 : 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정규직 노동자 '과보호론'에 따른 비정규직 보호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 연구내용
 -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방안 주요 내용
 -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유연성의 정도와 노동시장 안정성
 -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여성과 아동 안전을 위한 지역의제 발굴

- 연구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3월 1일(3개월)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 아동 안전 정책 개발
- 연구내용:
 - 구도심 공폐가에 대한 안전 대책
 - 아동의 교통 안전을 위한 스쿨존 검토
 - 밤길 보행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사례 검토
 - 1인 가구 비혼 여성의 주거 안전을 위한 정책 사례 소개
 - 주민 공동체를 활용한 안전 정책 사례 소개
- 연구성과:
 - 토론회 개최, 당 정책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

주제 : 경력단절 여성 지원 새일센터 평가

- 연구기간 : 2014년 1월 10일 - 2014년 1월 11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의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성 검토
- 연구내용:
 -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실적에만 급급
 - 대응방향 :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 지표를 강화할 것 요구 등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주제 :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할당제에 미치는 효과

- 연구기간 : 2014년 2월 13일 - 2014년 2월 14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연구내용:
 - 정당공천제 논쟁에서 찬반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치개혁 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
 - 여성할당제가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한 바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공천제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과 공천 현황

- 연구기간 : 2014년 4월 3일 - 2014년 4월 4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후보 공천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과 현황을 보면서 정의당의 여성후보 공천에 있어서의 기준 마련
- 연구내용:
 - 각 정당별 여성 후보 공천 제도가 있음에도 지역주의, 연고주의로 여성들이 다수 전략 공천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
 - 여성할당제가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이해되기보다는 남성 후보에 대한 역차별 또는 당내 갈등 요소로만 인지되고 있음.
 - 여성할당제가 토크니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여성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여성가족부 2015년 예산안 분석

- 연구기간 : 2014년 9월 28일 - 2014년 9월 29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예측
- 연구내용:
 - 2015년 여성가족부 예산 편성 중점사항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지원과 경제활동 지원
 - 그 외 항목별 사업 방향 요약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주제 : 성매매특별법 제정 10년, 향후 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9월 28일 - 2014년 9월 29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04년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연구내용:
 -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특별법이 갖는 의의
 - 성매매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성판매 여성의 ‘비/범죄화’에 입장 검토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성매매에 대한 당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군대 내 성범죄 실태와 예방책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14일 - 2014년 10월 15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군대 내 성폭력 실태와 예방책 검토
- 연구내용:
 - 민간인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여 군대 내 성폭력이 갖는 특징
 -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요약
 -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지위체계에 의한 권력형 폭력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행 군사법체계, 개선 방안
 - 군대 내 성폭력 예방과 사건 사후 처리를 위한 정책 과제 제시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성별격차지수(GGI)를 통해 본 성평등 정책 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28일 - 2014년 10월 29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성별격차지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 분석 및 정책적 과제 도출
- 연구내용:
 - 2010년 이래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가 하락 추세
 - 주요 하락 원인은 경제적·정치적 성별 격차 때문
 - 2013년 여가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로 정책 방안을 수립할 것이 제기되었으나 현행 정부 정책 방향에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27일 - 2014년 11월 28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주요 내용 검토
- 연구내용:
 -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개정 이후에도 남는 문제(호적제도의 흔적과 부계혈통주의, 출생신고제도 개정안의 한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성 등)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인구구조 여초현상 대비 여성·노인 정책의 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25일 - 2014년 11월 28일(4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고령사회 남녀 인구 역전으로 인한 여초 현상 대비 여성·노인 정책의 방향 검토
- 연구내용:
 - 성비, 연령대별 인구비 분석을 통해 향후 인구변화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로 여성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
 - 그러나 노인 남성에 비해 노인 여성의 빈곤이 예측되므로 이를 반영한 여성·노인 정책 수립이 필요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미등록이주민 자녀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11일 - 2014년 12월 12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등록이주민 자녀들의 권리보호 법안 발의의 배경과 내용 검토
- 연구내용:
 - 미등록이주민 자녀들의 권리보호 법안 발의의 배경과 각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 비교
 -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주장과 근거 분석
 - 아동인권 측면에서 미등록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권리 보호의 정당성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둘러싼 쟁점과 성소수자 인권

- 연구기간 : 2014년 12월 11일 - 2014년 12월 12일(2일)
- 연구분야 : 여성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서울시민인권헌장이 논란이 된 배경을 살펴보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
- 연구내용:
 -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둘러싼 반대 입장과 찬성 입장의 주요 주장과 시정 점거 사건의 배경 정리
 -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 무지개 농성단의 주요 입장 정리
 - 인권헌장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 내용이 들어가는 것의 의의와 주요 내용 검토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과 사업에 반영

주제 : 정부의 '규제개혁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평가

- 연구기간 : 2014년 04월 01일 - 04월 14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으로 추진한 '규제비용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로 규정
 - 정부의 규제개혁의 문제점
 - 규제개혁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검토 및 평가
 - 현장건의 규제개혁 48개 과제의 성격 분석
 - 과제별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계획 및 문제점
 - 추가 검토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연구성과
 - 정부의 규제개혁 및 현장건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당론을 입안하여 언론기사 반영 및 각 의원의 정부 업무보고에 활용함.

주제 : 우리은행 매각 추진배경과 전망

- 연구기간 : 2014년 06월 21일 - 07월 01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대해서 매각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금융위(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리은행 매각방안
- 금융환경과 우리은행 매각추진의 배경
- 금융위의 우리은행 매각방식의 문제점
- 바람직한 우리은행 매각방안

○ 연구성과

- 우리은행 매각은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론을 입안하여, 금융위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시기에 ‘바람직한 우리은행 민영화방안’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함.

주제: 「단통법」개정과 통신비 인하 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09월 22일 - 10월 04일(0개월 13일)
- 연구분야 : 미방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이동통신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소비자불만에 따라 단통법 개정 및 통신비 인하정책방향을 연구.
- 연구내용
 - 「단통법」 시행과 단통법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단통법의 한계 및 문제점
 - 단통법의 주요 개정방향
 - 단말기가격 인하, 통신비 인하 실현 정책방향
 - 이동통신요금 시장의 구조변화 유도방안
- 연구성과
 - 단통법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입법을 통해 정의당의 단통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심상정의원 대표발의토록하여 이동통신 단말기가격인하 정책에 기여함.

주제 : 2014~2015년 경제,금융 동향과 전망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11일 - 11월 13일(0개월 03일)
- 연구분야 : 기재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4년~2015년 경제, 금융동향과 전망을 연구분석하여 당의 경제 및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소속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연구내용
 - 2014년 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2015년 경제,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 최경환 경제팀 100일에 대한 평가
- 연구성과
 - 2014~2015년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연구를 통해 최경환 경제팀 100일에 대한 정책논평을 함. 소득주도성장을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당론입안 및 언론기사에 반영함.

주제 :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안 제정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01일 - 11월 18일(0개월 18일)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자체, 외부전문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방안과 금융기관지배구조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의미-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입법방향- 금융회사의 대주주적격 심사제도 확대도입의 필요성 ○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당과 이해관계 당사자의 정책방향을 수렴하였음.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으로 개최하고 기재위 박원석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발의함.

주제 :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대한 입장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26일 - 11월 28일(0개월 3일)
- 연구분야 : 정무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 금융기관지배구조개혁을 위한 정책방안과 금융기관지배구조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 발표배경 분석-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 내용분석-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 추진절차의 문제점○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의 문제점을 정책이슈브리핑에 게시 언론기사 반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제정법률안에 반영함.

주제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01일 - 12월 10일(1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기재위
- 연구방법 : 자체,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사회적기업 등 중앙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는 지원제도의 제도별 한계 개선과제 및 사회적경제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정책목표 수립의 필요성, 부처간의 사업의 중첩성에 따른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조성 및 성장 전략에 따른 기능과 역할의 분담방안 마련.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전담기구의 올바른 거버넌스를 제시함.

○ 연구내용

-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관련 지원제도 고찰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 해외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개선과제

○ 연구성과

-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박원석의원 대표발의로 발의함.

주제 : 고령화시대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방향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01일 - 12월 10일(1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기재위
- 연구방법 : 자체,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인구고령화의 진전이 금융시장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산업의 변동성을 예측하고자 함. 선진국들의 금융산업 변화와 대책에 대해 한국의 금융산업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의 금융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인구고령화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구고령화 진전에 따른 선진국의 금융대응 사례
- 고령화시대 금융산업 변동에 대한 금융감독 정책방향
-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연구성과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 변동에 따른 금융감독정책 방향에 대한 당의 입장 수립, 금융감독 방안 변화에 대한 입법대안 마련을 위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금융정책협의회를 구성함.

주제 :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과 실현방안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01일 - 12월 10일(1개월 10일)
- 연구분야 : 미방위
- 연구방법 : 자체,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내 가계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2014.1분기)로 세계적으로 높음, 단말기 가격도 이통사들의 보조금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음. 적정통신비 산정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입법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 합리적인 단말기의 종류 및 생산, 유통을 위한 방안
- 적정통신비 산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 통신비 및 단말기 가격책정방안
- 통신산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 연구성과

가계부담을 높이는 통신비 및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정비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하기 위해 당의 전략의제 사업으로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상정의원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 예정.